

경기일보

HOME > 지역사회

[67년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이젠 평화관광이다] 5좌담회

김요섭 기자 | 승인 2021.09.15 13:12

“판문점은 살아있는 역사... 분단 상징 넘어 세계적 명소로”

파주시, 정전협정으로 잃어버렸던 주소... 67년만에 작년 12월 찾아 ‘영토주권회복’

매년 1천만명 이상 오는 세계적인 관광지, 주민관광객 자유롭게 이동 거주 할 수 있는

접경지역 정책 이원화관광거점 지정 필요



(왼쪽부터 시계방향) 최종환 파주시장/윤후덕 국회의원/박정 국회의원/이용선 국회의원/이동미 건국대 겸임교수/최동균 지우학문화재단 대표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파주시는 정전협정으로 잃어버렸던 판문점 주소를 지난해 12월23일 다시 찾았다. 67년만이였다. ‘영토주권회복’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시 찾은 판문점 주소는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다. 판문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선언과 이듬해 6월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전세계에 분단의 상징에서 한반도 평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본보는 주소 없는 판문점을 심층 보도해 지적복구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판문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선언과 이듬해 6월 남북미정상 회동으로 전 세계에 분단의 상징에서 한반도 평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본보는 좌담회를 마련, 판문점 평화관광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4·27판문점선언 등과 연계한 판문점 평화관광 추진 당위성은.

▲윤후덕 국회의원-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평화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측에서 진행됐다. 종전선언?비핵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던 모습은 국내외에 벅찬 감동을 줬다. 두 정상회담이 만났던 판문점 평화의 집과 도보다리, 회담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관광자원화하면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수 있다. 베를린장벽보다 더 분단과 갈등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다.

- 판문점의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최동균 지우학문화연구소 대표:판문점 활용은 평화와 안보 중심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잠재 가치가 있고 평화관광상품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판문점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Piano Man'과 'Honesty' 등 히트곡을 남긴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 노랫말에도 판문점이 등장한다. 판문점은 지금도 남북간 협상장소로 쓰이나 공공롭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 판문점을 둘러싸고 개성부와 장단부간 관할권 문제로 수백년간 협상이 진행됐던 장소란 점을 정조 8년(1784년) 12월17일 실록 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판문점은 이래저래 협상이라는 운명을 타고 났다. 판문점은 특히 조선 옛길(6대로) 중에서도 중국으로 오고 가는 공식 사신길인 의주대로에 놓여 있어 역사·인문학적 의미도 남 다르다.

-왜 (판문점) 남북평화관광인가.

▲이용선 국회의원:판문점과 DMZ 일원은 전쟁이 끝난 지 오래 됐지만 어중간한 정전협정으로 긴장이 여전하다. 남쪽은 유엔사, 북쪽은 북한이 관할하는 이 첨예한 대립의 공간을 평화공간으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대안 관광이자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써 남북평화관광 잠재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실현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유엔사는 판문점 등 DMZ 관광객 방문도 '허가'라는 절차적 사안을 넘어 까다롭게 권한을 행사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해결책이나 먼저 중간단계로 남북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당사자간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노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6월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포럼에서 접경지역문제 해결과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남북접경위원회 설치를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통일은 항상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독 신동방정책 설계자 에곤 바르(Egon Bahr)의 신념이었다. 선포와 후통일과 전 유럽의 긴장 완화 없이 독일 통일도 어렵다는 혜안이 담겨 있다.

-바람직한 판문점 평화관광은.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관광의 본질인 방문과 문화경험을 체험·공유하기 위해 심리·물적 접근성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판문점 평화관광 이행 전담조직이 설립돼야 한다. 재정 투입과 효율적인 방문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조정하고 이행할 가칭 '평화관광청' 또는 '대통령직속평화관광위원회' 설립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판문점 평화관광의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 '판문점및평화관광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 판문점과 비무장지대의 중장기적 평화관광정책과 지역중심의 접경지역 평화관광정책을 이원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판문점에 대한 평화관광거점 지정도 필요하다.

-판문점 평화관광을 위한 해외 사례는.

▲이동미 건국대 겸임교수:판문점의 역사·시간·장소성을 잘 살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 사례를 살펴보자. 베를린 장벽 일부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East Side Gallery)가 됐다. '체크 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는 베를린 장벽의 유명 검문소로 장벽이 개방된 후 철거됐다. 검문소를 재현해 놓았다. 베를린 길바닥에는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걸림돌)이 있다. '여기에 ○○○가 살았다'로 시작하는 슈톨퍼슈타인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최종 주거지 혹은 일터 앞에 설치된 10cm×10cm의 황동 도금판이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판문점이 베를린보다 매우 작은 공간이나 군사분계선 등은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박물관의 진공유리관 속에 갇힌 여타 전시물과는 비교가 안된다.

-판문점 평화관광을 위한 정전협정과 유엔사규정 개정방향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단기적으로 UNC(유엔사령부) 해체 전까지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약속한 4·27판문점선언 실천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UNC를 설득해야 한다. 한 예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선 유엔사 규정을 과감히 개정,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출입통과에 평화관광을 포함, 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전협정 제61조에 근거, UNC는 북한군사령관과 협의, 정전협정 남측 서명자 임무를 한국군 사령관에 위임

하고 남측 서명자를 한국군사령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측과도 긴밀하게 협의에 나서 미국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정전협정 남측서명자 교체준비위TF'를 공식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관할인 파주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최종환 파주시장:파주시는 해마다 1천만명 이상 찾아오는 세계적인 평화관광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판문점이다. 자유의 집과 도보다리, 공동기념식수 장소,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판문점이 파주에 있지만 파주시는 아무 것도 지원할 수 없다.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통일부가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판문점 견학수요에 대비, 견학지원센터를 관할인 파주시로 이관해야 한다. 지난 18년간 파주시는 제3땅굴 등 다양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화관광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각고의 노력으로 67년만에 판문점주소도 되찾았다.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의 파주시 이관으로 DMZ평화관광벨트를 완성하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담대한 구상이 실현돼야 한다.

-국립 DMZ 기억의 전당은 판문점과 연계해야.

▲박정 국회의원:지난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차원에서 전쟁의 기억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DMZ 자연환경은 물론, DMZ 내 역사적 장소와 건축물 등은 최대한 보존되고 재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DMZ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해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의 살아있는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DMZ 기억의 전당이다. 판문점, 전적지, 분계선, 철조망, 땅굴, 감시 초소 등 DMZ 내 유산을 활용해 기념조형물을 건립하거나 국민 참여를 통해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돼야 한다. 당연히 지붕 없는 미술관 사업(국립현대미술관 DMZ 평화예술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판문점과 DMZ 기억의 전당의 연계는 가장 중요한 평화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다.

김요섭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요섭 기자